

연세대 사태- 인권유린 실태와 문제점¹⁾

박래균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1. 보수·공안세력의 97년 정권 재창출을 위한 터 닦기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인 5천명이 넘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연행되었고, 그중 462명이 구속되었던 김영삼 정권 최대의 사건은 지난 8월에 일어났다. 70년대부터 민족민주운동의 전통을 계승하였고, 지난 93년 전대협 이후의 후신으로 탄생한 한국 최대의 대학생 결사체인 한총련이 '친북이적 단체'로 일방적으로 매도된 상황에서 지도부는 모두 수배 또는 구속되었고, 각 학교의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교 내의 자치활동도 크게 위축되었다. 연세대 종합관은 마치 성지 순례 코스인 양 사회의 내노라 하는 인사들의 방문처가 되었다. 한총련은 야당 총재에 의해서마저 해체되어 마땅한 조직으로 규정되었고, 검찰·안기부·경찰·교육부 관계자들이 모여서 한총련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었다.

그후 연세대 사태를 계기로 보수강경세력들은 눈치 보기와 움츠림에서 깨어나 목소리 당당하게 사회 곳곳을 장악해 들어갔다. 그들은 96년 9월 강릉 북한 잠수정 침투사건을 계기로 더욱 힘을 얻고는 급기야 96년 12월 26일 안기부법과 노동법의 개악을 실행에 옮겼다.

연세대 사태 이후 학내 집회에도 연세대에서 동원되었던 헬기가 상공에 나타나 최루액을 뿌려대기 일쑤였고, 경찰은 수시로 학교에 드나들면서 유린하였다. 하지만, 여기에 저항하는 목소리는 너무도 작기만 하다. 다시 7,80년대 냉전 시기로 역사의 시계바늘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착각을 일으켰을 정도다.

이런 상황들은 연세대 사태가 당시의 9일간의 경찰과 학생들의 공방으로 끝난 것이 아님을 웅변해 주는 것이다. 또한, 연세대 사태를 조장한 정부 당국의 의도가 이제는 쉽게 간파될 수 있는 분위기가기도 하다. 연세대 사태는 지금도 계속되는 상황이며, 연세대 사태로 촉발된 공안 분위기, 보수화 분위기는 오는 97년 대선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사태는 97년의 대선정국을 향한 터닦기 위한 준비작업이었다. "서울 도심에 쑥대밭으로 만든 난동배들은 본질에 있어 쇠파이프와 화염병으로 무장한 「조선노동당」 재남 행동

1) 1996년 8월 15일 전후에 한총련이 연세대에서 열려던 범청학련 통일축전 행사를 둘러싸고 일어났던 경찰과 학생의 충돌을 대부분의 언론들은 '한총련 사태'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 말은 문제의 모든 것을 학생들에게 떠넘기려는 의도에서 나왔다고 보는 바,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장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이와 같이 부르도록 한다. 한총련은 '연대항쟁'으로 부르고 있으나, 이는 아직은 매우 주관적인 평가에 기초한 용어라고 판단되어 채택하지 않는다.

대원들이자 김정일의 충실한 하수인들이지 '대한민국의 학생'이 아니다"는 식의 공안 논리는 언제라도 동원되어 정치적 반대 세력 또는 경쟁 세력을 누르는 무기가 될 것이다. 바로 연세대 사태의 본질은 이런 공안 분위기의 대세를 조성하는데 있었던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공안세력들에게는 연세대사태는 매우 중대한 전략적 지점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연세대 사태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그에 대한 어떤 논의도 안중에 없었던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연세대 사태의 인권침해 실태를 짚어 보려고 한다. 이것은 '조선노동당 재남 행동대원'이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압해도 된다는 그런 논리가 이 나라의 인권신장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이 글에서는 연세대 사태의 정치적인 배경이나 한총련의 주장 등 모든 것을 다 살펴볼 수는 없다. 이 글의 목적은 단지 연세대 사태 당시 일어났던 학생들의 인권피해 부분을 그간 조사된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데 있다. 필자의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피해자의 증언과 언론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인권침해 문제를 따지는 것이 목적이다.

2. 연세대 사태에서 나타난 인권유린의 객관적 조건

그럼, 실제 피해 사례들을 살펴보기 전에 당시의 객관적인 조건을 96년 국회 내무위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먼저 살펴보자. 우선 연행된 학생은 12일부터 20일까지 모두 5,769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날짜별로 살펴보면, 연세대 사태의 시작부터 연행자가 발생했음을 잘 알 수 있다.

<표 1> 일자별 연행 학생수

일자별	계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연행자수	5,769	100	102	404	587	345	214	434	163	3,420

내무부 96년 국정감사 제출 자료

그러나, 연행된 학생수에 비해 진압작전에 동원된 경찰 병력(경력)은 모두 25,633명으로 총연행자수에 비해 4.4배나 많았다. 그런데 대략 연행되지 않은 학생들이 연행자수와 비슷할 것으로 추산할 수 있을 텐데²⁾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찰은 학생에 비해 최소 2배나 더 많은 수였다. 거기에 경찰은 각종 진압장비를 갖추고 있었다. 곤봉을 휴대하였고, 죽검과 쇠파이프마저 들었고, 화염병과 돌을 학생들에게 맞아서 던졌다. 더구나 최루탄 발사장치와 헬기까지 동원하였고, 소방차마저 동원하였으니 사실 학생들에 비해 월등한 무장력을 갖추었던 것이다. 비록 학생들 중 사수대가 쇠파이프를 들었고, 화염병을 몇 천 개 준비했고, 수시로 돌을 던졌다 해도 과거처럼 8월 15일을 전후해 진압하려 했다면 얼마든지 가능했던 것으로 보

2) 조선일보 96년 8월 16일자 사설 중에서

3) 연세대가 원천봉쇄 된바람에 많은 학생들이 연세대 안에 진입하지 못하고, 서울 시내 몇 학교에 분산되어 있었다. 따라서, 연세대 안에 모인 학생들은 대략 8천명 정도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과대와 종합관에 고립되어 있던 학생들이 한총련 지도부의 주장에 따르면 약 4천명으로 추산되므로 경찰이 연세대 외곽을 봉쇄하고, 신촌 일대에서 학생으로 보이면 무조건 연행하던 조건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탈출한 것으로 보인다.

인다. 그러나, 경찰은 20일까지 사태를 지연시키면서 학생들을 폭력집단으로 부각시키는 정치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경찰이 갖춘 방어장비와 관련하여도 경찰은 투구와 진압복을 쓰고 있어 얇은 옷만을 걸친 학생들에 비해 방어력이 월등했고, 방패도 휴대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진압 경찰 중 부상자가 많은 것은 유난히 학생들의 시위가 과격했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무리하게 사태를 지연시키면서 공방을 벌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이번 사태의 과정에서 두드러진 것은 헬기의 출현이었다. 헬기는 그전에도 80년 광주항쟁 당시, 86년 건국대 사태 당시, 94년 서울대에서 열린 범민족대회 때도 등장했지만, 이번처럼 많은 헬기가 집중적으로 공중에서 최루액을 살포한 경우는 없었다. 헬기는 8월 14일 처음으로 등장했으며, 이후 20일까지 연 43대의 헬기가 총 182회나 공중에서 최루액을 살포한 것으로 경찰은 밝히고 있다⁴⁾. 이 자료에 의하면 8월 15일에서 18일까지 헬기에 의한 공중 최루액 살포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헬기는 이런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선무방송'을 했고, 유인물을 살포했다. 20일에는 종합관 진압작전에서 특공대원들을 옥상에 투입하는데 활용했고, 이후 이과대에서 탈출한 학생들을 추적하는데도 이용되었다. 즉, 헬기는 다각도로 동원되어 이제는 옥상뿐만 아니라 공중에서 시위진압을 하는 전형을 만들어냈다. 문제는 지상에서 발사하는 최루탄보다도 헬기에서 살포하는 최루액이 훨씬 더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최루액의 성분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최루탄 분말이나 최루액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연구는 알려진 게 없다.

<표 2> 투하 헬기별 시간 장소 및 분량

구분	총계	8.14(13:40-17:00)	8.15(09:47-19:40)	8.16(11:25-20:00)	8.17(10:12-19:20)	8.18(10:00-19:45)	8.19(08:00-19:30)	8.20(05:40-14:00)
투하 헬기수(회수)	43대 (182회)	9(27)	10(53)	7(28)	4(22)	4(27)	5(15)	4(10)
투하량	물(l)	53,650	3,750	15,250	10,050	9,000	12,000	2,400
	최루액 연막	1,255	75	175	185	300	400	80
	최루액 살수	160	15	100	45			
	연료(kg)	2.44	0.27	0.4	0.3	0.47	0.5	0.3
투하장소		연세대학교						

* 물: 최루액 혼합비를 연막 최루액=30:1
살수 최루액=100:1

내무부, 96년 국정감사 제출 자료

그렇다면, 이전의 범민족대회 진압과정과 이번 연세대 사태에 대한 진압에 대한 비교를 경찰 자료로 해보자.

4) 86년 건국대사태 당시에는 2대, 94년 범민족대회에서는 3대의 헬기가 동원되었던 데 비해 올해 연세대 사태 때는 12대의 헬기가 동원되었다.

<표 3> 현정부 출범이후 범민족대회 시위 및 양상

구분	93년도	94년도	95년도	96년도	
기간	8.13-15(3일간)	8.13-15(3일간)	8.12-15(4일간)	8.12-20(9일간)	
장소(학교명)	한양대학교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연세대학교	
가담인원	11,000명	10,000명	18,000명	8,200명	
동원경력	169개 중대	170개 중대	148개 중대	177개 중대	
헬기 사용		3대		12대	
시위 양상	화염병		50개	4,300개	
	쇠파이프	500개	2,900개	5,100개	12,000개
	돌	2,200개	5,000개	2,500개	35,000개

내무부 96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이 자료를 보면 그대로 믿으면, 학생들의 동원력은 현저히 준 반면에, 폭력성은 급격하게 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경찰과 정부는 이런 통계 자료를 근거로 한총련의 폭력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통계의 모순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즉, 12,000개의 쇠파이프는 9일로 나누면 1,300여개 정도가 된다. 95년에 등장한 쇠파이프가 5,100개이므로 이를 대회 기간인 4일로 나누면 1,280여개 정도가 된다. 즉, 연세대 사태에서 경찰의 통계로도 유난히 올해가 폭력적이었다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는 점이다.

반면, 가담인원이 더 많았던 95년에는 148개 중대만이 시위진압에 동원되었는데 비해 훨씬 더 인원이 적은 96년에는 177개 중대가 동원되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가. 이는 95년 범민족대회가 거의 합법적으로 치러진 데 비해 96년에는 허가를 받지 못한 집회였다는 점, 바로 이것을 기회로 한총련을 그들의 평소 공언대로 '발본색원'하려 했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총련 학생들이 주장하듯이 지난 6월 전북대에서 열린 한총련 출범식이 5만명 규모의 학생들이 참가하였어도 아무런 충돌없이 치러졌음을 비교하면, 정부의 의도는 더욱 명확해지는 것은 아닐까 싶다. 즉, 한총련을 희생양으로 한 공안탄압 분위기의 조성, 이를 통한 반대세력의 힘 꺾기로 활용되었고, 따라서 교활한 정부와 순진한 학생들의 싸움에서 학생들이 일방적으로 매도된 것이 아니겠는가. 연세대 사태 내내 청와대 비서실장이 현장에 모습을 나타내 강경진압 방침을 시달렸다는 보도도 있고 보면, 이 사태는 한총련의 폭력성 이전에 정부의 강경진압의 의도가 더욱 큰 문제의 원인이었던 것이다.

이상의 경찰측 자료들을 살펴 본 결과, 사태는 분명해진다. 즉, 연세대 사태에서는 객관적으로도 학생들이 인권피해를 훨씬 더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정부측이 연세대 사태를 준비하고, 정권적인 차원에서 이를 적극 이용했던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세대 사태에서 나타난 인권침해

9일간의 연세대 사태가 끝난 직후 인권운동사랑방⁵⁾, 민가협 등의 인권단체들은 학생들을

5) 총 조사건수 108건 중 남자 38명, 여자 70명이었다. 유형별로는 1. 폭행- 86건(30건) 2. 성폭언- 36건(3건) 3. 폭언- 27건 4. 성추행- 41건(14건) 5. 고문, 허위자백- 4건(목적 1건-물고문) 6. 부상- 21건 7. 최루탄 피해- 8건 8. 재산피해- 10건(목적 1건) 9. 후유증- 6건(2건) () 안은 자신이 당

개별 접촉하면서 피해상황들을 조사하였다. 이런 결과는 96년 9월 13일 중간조사 결과로 발표되었으며, 국회 국정감사 기간 중이었던 10월 9일과 15일 추미애 의원 등 새정치국민회의 의원들이 서울경찰청과 경찰청에 대한 감사에서 폭로함으로써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다. 또한, 피해 당사자들 중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7명이 형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여성단체와 인권단체들은 특히 여학생 성추행에 대해서 당시 박일룡 경찰청장등을 고발하기도 하였다.

그럼 연세대 사태의 인권침해를 유형별로 살펴보자.

7. 폭행

폭행은 가장 광범하고 일반적인 경우였다. 연세대 안에서 일어났던 경찰과 학생간의 공방으로 경찰은 총 1천명이 부상했다고 밝히고 있으며, 언론에서는 주로 경찰이 학생들에게 당하는 모습만 보여줘 학생들을 폭력집단을 내몰았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경찰보다 방어 수단이 더 적은 학생들이 훨씬 더 심각하게 당했을 것이다. 실제 학생들은 연세대 공방 과정 뿐만 아니라 연행과정에서 그리고 수사단계에서 집중적인 경찰의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연세대 김현기씨 등 4명은 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실명을 했고, 동국대생 박아무개씨는 연행되어 가던 도중 지나가던 청카바 체포조가 곤봉으로 이빨을 내리쳐 이빨 7대가 뽑혀 나가기까지 했다. 숭실대생 김도형씨의 경우 종합관 진압과정에서 4층에서 밀리로 추락하여 수술을 받았고, 고려대생 2명은 입원했다. 손, 다리 부상 정도는 비밀비재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학생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포승줄을 하고 심지어는 목에까지 밧줄을 걸어 목을 졸라대던 전경들도 있었다. 학생들을 무릎을 꿇려서는 뒤로 포승줄을 하고 등짝에는 마치 80년 광주항쟁 당시 시민군을 연행하듯이 일련번호를 매겼다. 8월20일 취재중이던 서울신문 고영훈 기자 등이 폭행을 당했고, 국민일보의 여기자도 폭행을 당하는 등 기자들에 대한 폭행도 심하게 일어났다. 경찰은 시위와는 무관한 일반 시민들이나 학생들을 신촌 주변에서 무차별로 연행했다가 48시간이 지난 뒤에야 풀어주기도 했다.

8. 성폭언

진압경찰들은 단지 학생들에게 폭행만 가한 것이 아니었다. 여학생들의 경우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듣는 끔찍한 성폭언을 그곳에게 수시로 들어야 했다. 남학생들의 경우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588이나 가라. 이런 년들은 일본이나 다른 나라로 다 수출해 버려야 한다.

니네가 뭐 김정일 기쁨조냐. 북한으로 보내라.

니네 사수대하고, 남자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밤에 뭐했냐. 사수대한테 니네 몸대주고 살았지?

너희는 북한에 가서 김정일 기쁨조나 해라 이 씨발년들아

고년들 털 참 많게 생겼다

한 사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당한 것을 목격한 건수임. 이중 24건의 사례는 직접 녹음한 것을 풀었음.

야 이씨발년들아 니네 위안부 노릇하려고 왔나

들 한번 던진 애들한테 한번씩 빨아 줘나

이처럼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이 대목을 추미애의원이 그대로 옮겨서 경찰 성추행 부분을 문제화시켰던 것이다. 여학생들의 경우 폭행이나 성추행보다도 이런 성폭언에 의해 더 크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것은 평상시의 분위기에서 음담패설을 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어떤 여학생의 경우 한 전경이 '전경차에 올라타면 내년들 다 강간해 버리겠다'는 말에 실제로 강간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에 떨었다고 한다. 그 많은 여학생을 그것도 전경차라는 조건에서 강간한다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그걸 사실로 믿을 수밖에 없는 공포스런 분위기에서 들었던 치욕스런 욕이었다. 인간적인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은 짐승같은 욕지거리에 여학생들은 수치와 더불어 분노를 느껴야 했고, 치를 떨며 울어야 했다.⁶⁾

9. 성추행

성추행도 가장 일반적인 인권침해 유형이었다. 거의 모든 여학생들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과언이 아닐 만큼 진압 전경과 의경, 그리고 경찰서 형사들에 의해 거의 20일 진압과 연행 전 과정에서 행해졌다. 여학생들의 가슴을 만지거나 심지어는 음부와 엉덩이까지 다듬었고, 어느 경찰서에서는 속옷 검사를 하기까지 했다. 이런 속옷 검사를 한 것은 여형사였지만, 유리창 너머 복도에서 전경과 의경들이 들여다 볼 수 있는 상태에서 한 것은 집단적인 성추행과 다름없었다. 또, 어느 경찰서에서는 당시 여름 옷차림의 여학생들을 다리를 벌리고 바닥에 앉게 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다가도 기자들이 오거나 하면 그런 행위들을 멈추었기 때문에 사진 자료도 확보하기 힘든 경우다. 특히나 전경이나 의경들은 진압복에 소속과 이름을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성추행을 더 자연스럽게 자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0. 고문, 허위자백 강요

고문이란 것이 물고문이나 전기고문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수사상의 목적으로 행하는 가혹행위 일체를 고문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국제인권조약상의 해석이다. 경찰서 내에서 자행된 각종 인권유린 행위는 따라서 모두 고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두드러진 경우를 보면, 한 경찰서에서는 얼굴에 수건을 씌운 채로 물을 들이붓는 물고문 장면까지 목격되었다. 또, 당시 대량구속 사태를 상부에서 지시하는 바람에 각 경찰서별로 구속자를 맞추는데 혈안이 되어서 심지어는 몇 학생을 밖으로 나오라고 해서 쇠파이프를 들게 하고 이것을 사진으로 찍어 구속시키는 사례까지 있었다. 사진을 통한 대조라는 것도 기실은 신빙성이 없는 것이었다. 옷을 갈아 입었다거나, 남의 옷을 입었을 경우 이 사람은 영남없이 걸려들 수 있는 것이었다.

많은 학생들의 경우 경찰서에서 누구에게 조사를 받았는지를 기억해 내지 못했다. 그것은 계속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는 공포스런 분위기 때문이었다. 감히 고개를 들어 형사의 얼굴

6) 전경들이 한 성폭언 중에 "일본군에는 위안부가 있었는데, 우리한테 위안부 하나 없다"는 등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성폭언도 꽤 많이 했다. 진압 경찰들은 민족의 치욕이고, 비극이었던 위안부마저 이처럼 여학생을 능멸하는 욕에 등장시켰던 것이다.

을 들여다 볼 용기도 내지 못할 만큼, 고개를 들기만 하면 곤봉과 신발짝까지 벗어 구타를 해줬던 것이다. 한 사람당 겨우 3-4시간의 조사를 통해서 그것도 명확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완강하게 혐의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속을 시켰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강정환(성공회신학대 1)씨는 중앙경찰서에서 형사 1명에게 쇠파이프를 잡았다고 자백할 것을 강요당했으며, 당시 조사실에 있던 학생들과 함께 의자에 앉혀진 채 머리를 뒤로 젖힌 상태에서 코에 물을 붓는 등의 고문을 당했다. 강남경찰서에 연행되었던 7 아무개(여·8대 줄)씨는 경찰이 “옷을 벗기겠다”며 위협해 화염병을 제작했다고 허위진술해 구속되었다.⁷⁾

㉠. 최루탄(최루액) 피해

이번 연세대 사태에서 심각한 것이 최루탄과 최루액에 의한 피해였다. 최루액은 헬기에서 살포한 것이었고, 거기에는 붉은 형광물질이 섞여 있었다. 최루탄도 지독히 매웠지만, 학생들을 수포로 고생하게 한 것은 단연 최루액이었다. 최루액은 액체이기 때문에 피부 접촉력이 매우 강했다. 어느 학생의 경우는 등과 목에 수포가 생겼으나 이과대에 고립되어 있어서 치료도 받지 못했다. 이런 최루탄과 최루액에 의한 피해는 마치 화상을 당한 것과 같아서 수포가 생기고 살갓이 벗겨져 버린다. 한달 후에나 흉측한 모습의 화상 자국은 사라진다고 한다.

㉡. 재산피해

한 여대생은 누가 맡겨 놓은 40만원 돈을 갖고 있다가 연행되었는데, 형사가 이를 발견하고는 압수했다고 한다. 그러나, 조서 어디에도 돈을 압수했다는 대목은 없었고,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집에 자주 전화를 해 협박을 하었다고 한다. 증인자들에 의하면 삐삐를 뺀 경우와 지갑, 카드 등을 뺀 경우도 있었다. 종합관에서 진압될 당시 워낙 경찰이 없어서 제대로 짐을 챙기지도 못했다. 심지어 연세대 총학생회는 고노수석 군의 추모기금으로 모아 두었던 2백만원까지 8월 14일 경찰의 1차 진압시에 탈취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진압 경찰들은 종합관의 유리와 기물들을 파손하였고, 이과대에서도 실험실과 연구실에 난입하여 여러 가지 물건에 손을 댔던 것으로 학생들은 증언하고 있다.⁸⁾

이런 인권피해를 학생들은 경찰에 의해 당했다. 그러나,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하지만, 경찰에 의한 인권피해만 문제는 아니다.

여기서는 거론하지 않겠지만, 연세대 사태와 사태 종료 이후 보여주었던 언론의 보도행태는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였다. 조선일보의 경우 이과대 학생들이 산소통을 터뜨리겠다는 의지도 않은 말을 크게 보도해 마치 학생들이 앞 뒤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했다. 그외에도 매일처럼 경찰이 폭행당하는 같은 화면을 보여 줌으로써 학생들의 폭력성만 부각시킨 점이라든가, 학생들의 주장의

7) 「96년 경찰 실태 보고서」, 제12차 총회 보고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1997년 3월, 90쪽

8) 연세대의 재산피해는 한총련 학생들에 의한 것도 많지만, 실제 종합관과 이과대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도부의 방침에 따라 중요 기물과 연구실적들에는 학생들이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한다.

근거는 밝혀지 않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빨갱이로 몰아간 부분은 분명히 피해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중대한 인권침해다.

대강 인권피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여기서 한가지 짚고 갈 일이 있다. 그것은 후유증 문제다. 헬기소리만 나면 건물 안으로 기겁을 하고 뛰어 들어가는 여학생, 경찰에 의해 폭행당하는 악몽을 꾸는 남학생, 여자로 태어난 것이 저주스런 여학생 등 이들이 겪는 후유증은 매우 심각한 것이다. 이런 후유증은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고문에 의한 후유증이나 성폭행에 의한 후유증처럼 정신병을 유발할 수 있다. 몇 년이 지나서도 당시의 기억을 잊지 못하고 그 어둔 기억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학생들의 후유증은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⁹⁾

4. 결어- 연세대 사태의 교훈

현 정부 들어와서 한국의 인권문제는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 경찰의 폭력도 날이 갈수록 흉폭해지고 있다.¹⁰⁾ 총기사고¹¹⁾도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마저도 열지 못하게 하고 있다.¹²⁾

연세대 사태는 사실상 예고된 것이었다. 현정부 들어서 개혁 바람에 밀려났던 공간세력은 지난 94년 주사파 파동으로 다시 권력의 핵심부에 등장했으며, 이들은 개혁의 후퇴와 더불어 권력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¹³⁾ 이들 세력들은 권력 핵심부의 정권 재창출 의도를 받들어 인권탄압을 정부의 정책으로까지 격상시키고 있다.

연세대 사태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개혁의 여파로 마치 이 사회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환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직은 변화가 없음을 일깨워 주었다. 사법부와 각종 인권정책과 기구 그 위에는 권력이 있으며, 권력의 입김에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권제도와 법률, 기구들은 사상누각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 것이다.

결국 인권을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이들의 끊임없는 감시와 투쟁으로 쟁취한 것이 아닌 한 언제든지 뺏길 수 있는 취약한 인권의 토대 위에 우리가 서 있음을 똑똑히 목격한 것이

9) 연세대 사태에 참가했던 이들의 경우 특히 악몽에 시달린다거나 대인기피증세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정신과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여학생들의 경우 여성단체에 상담을 의뢰해도 좋다. 문제는 이런 정신적인 억압을 그대로 방치하면 몇 년 후에 정신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10) 지난 3월 29일 평화적인 학생들의 시위에 대해 경찰은 토끼몰이식 진압을 펼쳐 연세대생 노수석 씨를 사망케 했다. 또, 경찰은 장애인 노점상 이덕인씨가 인천 연수구 앞바다에서 의문의 변사체로 떠오른지 하루만에 병원 영안실에 난입, 시체를 강탈해 갔다.

11) 연세대 사태 당시인 8월 19일 당시 박일룡 경찰청장은 “폭력시위 발포 불사”를 천명하여 시위 진압에도 총기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발언 직후 9월 5일 수원에서 경찰의 오인사격으로 2명이 부상을 당했고, 서울 북아현동에서는 폭주족을 쫓던 경찰이 주위에 있던 시민에게 공포탄을 발사했다. 또, 9월 9일에는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민가를 난입, 만삭인 임산부에게 가스총으로 위협하기도 했다. 결국 이런 경찰들의 무리한 총기 사용으로 박 청장의 발언은 실현되지 않았다.

12) 「96년 경찰폭력 실태에 관한 보고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제12차 총회 보고서, 1997년 3월, 80~92쪽 참조.

13) 최근 여당내에서 안기부법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정형근 의원은 6공때까지 안기부에서 대공업무 를 책임졌던 인물이다.

다. 그것은 지난날 인권침해를 저지른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그런 제도와 법률을 철저히 개폐하지 않고는 우리의 인권을 보장될 수 없음을 보여준 것이 아닐까.

사상과 신념, 양심을 발표할 기회마저 완전히 봉쇄당하는 5공으로의 회귀를 깨고 이 나라를 인권의 튼튼한 반석 위에 올려 놓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모두 심각히 고민해야 할 때이다.

홍익인간과 인본주의

수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본주의'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이 글에서는 '인본주의'의 의미를 밝히고, '인본주의'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인본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한다. '인본주의'는 '인간'을 본체로 삼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본주의'는 '인간성'을 강조하며, '인간성'이란 인간의 고유한 가치와 특성을 말한다. '인본주의'는 '인간성'을 존중하고, '인간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본주의'는 '인간성'을 존중하고, '인간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본주의'는 '인간성'을 존중하고, '인간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본주의'는 '인간성'을 존중하고, '인간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본주의'는 '인간성'을 존중하고, '인간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차 례

인권하루소식

합본 VII

(675- 796호)

1997. 3.

인 권 운 동 사 랑 방